

국가예산 확보 · 현안 해결 국회 행보

도의회, 오늘 올 마지막 회기 돌입

김관영 도지사, 우원식 예결위원장 · 여야 원내대표 · 예결위 간사 · 상임위원장 등 국회 핵심인사 방문

2차 정례회 열고 내달 13일까지 행감 · 내년 예산안 심사

김관영 도지사는 7일 내년 정부예산안 예산심사가 한창 진행중인 국회를 재차 방문해 전북경제의 체질 개선과 도약을 뒷받침할 핵심 동력 예산 확보와 전북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숨겨진 행보를 이어갔다.



7일 국회를 찾은 김관영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찾아 전북 예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상 정립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7억원),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업인프라 구축(5억원) △전통식품 지역미생물 실증단지 구축(60억원)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20억원) 등의 내년 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문화·관광분야 국회다짐 증액이 필요한 주요사업으로 태권도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3억원)과 무형유산의 안정적 전승과 저변 확대를 위한 국립무형유산원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20억원)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김관영 지사는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면담하고 도정 주요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는 국가균형발전 논의에서 전북권이 소외되지 않고 타 조광역 권역들과 동등한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훈식 의원에게는 서남해 폐교로 인한 전북도민의 상실감을 설명하고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률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향후 예산 확보가 더욱 원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도지휘부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국회 주요인사·예결소위원장, 기재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지역정치권·시군과의 삼각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국회상주반을 중심으로 주요사업 삭감방지 및 증액요구 반영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의회는 8일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다음달 13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마지막 회기에 들어간다.

도의회에 따르면 먼저 이번 정례회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도청 교육청 등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해 도민의 권익구제에 앞장서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도의회에서는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도민들로부터 18건의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안을 접수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도민 제안을 검토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8일에는 개회식에서는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 김성수 의원(고창)이 도지사를 대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9일부터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22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한다. 이후 2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1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관련 자료를 폭넓게 확보해 검토·분석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업무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국무원의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총정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생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되도록 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 여건을 감안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를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7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을 찾은 원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안호영 의원과 지역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완주군의회, 국회에 지역 현안사항 전달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개소 · 수소특화국가산단 조성 건의문 등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심부건)에서 7일 완주군의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을 찾았다.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과 이경에 부의장 관련 부서 직원들이 지난 8월과 10월 채택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개소 건의문과 '완주수소특화국가산단 조성 건의문'을 들고 직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업무 관련 의원실을 찾아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힘을 모아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심부건 위원장은 완주군 지역 구 국회의원이 안호영 의원실을 방문해 안호영 의원과 면담자리를 갖고 완주군의 시급한 현안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심부건 위원장은 "완주 수소특화 국

산단 조성은 완주군의 미래 먹거리 확보는 물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완주군 지역경제 활성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인 안호영 의원이 직접 나서 이를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되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오늘 전달한 건의문 외에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 문제들이 많다"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 완주군 발전과 관련된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 이태원 참사 국조 재촉구

민중 "진상규명, 어떻게 정쟁 호도하나" ... 셀프수사 지적

정의 "국힘 반대 궤변, 동의 불가... 야당 제안에 응하라"

야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여당이 협력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추진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에 몰입한 것으로 보인다.

7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실패와 무능이 초래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회가 참목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이 국정조사에 소극적인 점을 질고 "어떻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정쟁이라고 호도할 수 있느냐"며 "경찰 검찰을 앞세워 시간을 끌며 참사 진실을 덮으려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 물음을 대신하는 게 국회 본분"이라며 "국민의힘은 정권 후위무사를 자처하는 게 아니라면 156명 국민의 생명이 스러진 참사를 정쟁으로 풀이하려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수본의 셀프 조사, 워싱턴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은 불가능하

다"며 "국회가 국정조사로 답하고, 그 래도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면 특검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여당에 수용을 촉구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고 방해를 할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는다"며 "궤변에 동의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의혹부성이고 사실을 간추려야 하는 시도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특위를 출범시켰지만 시작부터 원인 규명을 오히려 어렵게 하는 의혹 질은 행보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혹이 풀리지 않고 감추려는 시도가 있고 수사 당국을 믿을 수 없는 지금이 국민의힘이 말한 대로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의힘은 당장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 제안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뉴스

'승용차 기준 60대까지 충전 가능'

전주 평화 수소충전소, 내달 초 운영 본격 대용량 설치... 수소차 이용자 불편 대폭 개선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은경)은 완산구 평화동 소재에 국내 최대규모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오는 12월 초부터 본격적인 운영 예정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전주 평화 수소충전소는 2021년 환경부 민간공사사업으로 선정돼, 평화동 소재 시내버스차고지 부지에 총사업비 80억원(국비 42억원, 코아인베(주) 38억원)이 투입돼, 지난 지난해 12월 착공을 해 12월 준공 한다고 전했다.

전북지역에서 9번째로 구축된 전주 평화 수소충전소는 국내 최대규모인 시간당 300kg급 대용량으로 설치되며, 버스, 트럭, 상용차, 승용차 등이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됐다.

특히, 수소충전기 3기가 장착돼 수소서비스 기준 동시에 3대씩 시간당 약 15대(승용차 기준 60대)까지 충전 가능하며, 11월중 시운전을 거쳐 12월 초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주 평화 수소충전소 본격 운영에 따라,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지역의 수소차 이용자들의 충전 대기시간 단축 등 수소차 충전 불편도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전북지역의 경우, 수소차(버스 승용차)가 지속 보급되어 1,738 대(지난달 말 기준)까지 확대되었으

며, 특히 전주시의 경우 전북지역 전체 보급 대수의 절반에 가까운 852대 수소차가 보급됐지만, 기존 운영중인 8개 수소충전소(전주시 2개소)로는 1시간이 넘는 충전대기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역사회 수소차 인프라 확충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전북환경청은 지역사회 수소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수소충전소 구축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완공된 전주 평화 수소충전소 구축과 함께 금년내 전주시 승

전에 1기를 추가 증설하고, 내년에는 전주 상림(1기), 부안 진서(1기), 익산 목천(1기), 전주 색장(1기) 등 신규 충전소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7일, 전주 평화 수소충전소 부지에서 유체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평화 수소충전소 준공식이 열렸다.

김은경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전북 지역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른 부족 한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수소충전소 구축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확충을 통해 수소차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북지역이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이태원 참사 규명 국회 행안위

민중 "이상민 사퇴" vs 국힘 "이임제 체포"

<행안부장관>

민중 "수습 위해 빨리 사퇴를" 국힘 "세월호 선장보다 더 해"

여야는 7일 이태원 참사 원인을 추궁하는 첫 국회 차원 회의에서 일제히 정부의 실패를 질타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책임과 범정부 차원의 미약 단속 집중의 영향을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국민의힘은 이임제 전 용산경찰서장 행적 등 참사 당시 경찰의 구체적 대응과 허점 노출을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강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경찰서장 남희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했다. 경찰의 대응 실패에는 여야 구분 없는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용산 대통령실 이전 등 책임론에 힘을 쏟았고 국민의힘은 당

시 용산경찰서·서울경찰청의 대응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공세 핵심은 이상민 장관에 집중됐다. 천준호 의원은 이 장관에게 대통령실에 사의를 밝히거나 의논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천 의원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라고 문자 이 장관은 "없다. 의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은 "경찰 국 신설 경찰 장악에 상당한 전문성과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재난안전에는 어떤 경험, 전문성도 갖추고 있지 않느냐"며 "사태 수습을 위해서라도 빨리 사퇴하는 게 좋다"고 즉시 사

퇴를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사퇴를 명시적으로 촉구하지는 않았으나, 지난 발언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기상 민주당 의원 다음 순서에서 이 장관의 과거 논란성 발언에 대해 다시 의미를 물었다. 조 의원은 "경찰력을 더 투입해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등 지극히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달리 이 장관에게는 직접적 사퇴 압박에 해당하는 주문이 나오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은 참사 발생 당시 이임제 전 용산경찰서장의 행적을 중심으로 경찰의 구체적 대응 문제를 질타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사실상 경찰 대응 실패 지적으로 질의를 일관했다. 장재원

<용산경찰서장>

의원은 "1차적으로 참사 현장의 관할 서장의 책임을 밝히는 게 첫 순서다. 그런데 이임제 이 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터리 수준"이라며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것 아닌가. 언론에 드러난 상황을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살인 방조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이임제 전 서장 긴급 체포를 촉구했다.

여야는 한편 이날 질의에 앞서 출석 요청에 불응한 이임제 전 서장, 류기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채익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국회 출석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서장 등이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 다음 행안위 전체회의는 10일이다. /뉴스